제1회 일본 진단 세미나

- 주제: 위안부문제로 시작된 한일갈등, 그 해법은?
- 일시: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15:00-17:00
-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L Room
- 발표: 박철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 발표 내용

최근의 한일갈등의 출발점은 위안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한일갈등을 잘 봉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들을 보면, 법률 해석과 시민사회에 '갇힌'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측에서는 법률적인 해석, 즉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방점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을 필두로 한 시민사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적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일본과, 일본측에 최대한의 요구를 제시해 관철시키려는 정대협이 대립하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부각된 계기는, 작년 11월 교토 한일정상회담이었을 것입니다. 양국 정상이 45분 이상을 이 이슈 하나만을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노다 총리는 '이 문제는 1965년 기본조약에 의해 완결된 문제이며, 일본은 법적으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측에서는 1965년 기본조약은 민간 대 민간, 민간 대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해결에 관한 협정이기에 정부간 문제를 말소시킨 것은 아니며,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력'임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명백합니다.

물론 일본 측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된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는 1965년 기본조약의 대상으로써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일본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일간에는, 기본조약이 있음에도 나중에 양국 협의로 대처하기 시작한 인도적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사할린 강제이주자, 원폭피해자, 종군위안부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기본조약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들을 나름대로 취해 왔습니다. 노다 총리는 자국 정부의 이런 노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책임지지 않겠다고만 잘라 말했었는데, 이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신중하지 못한 언급이었다고 봅니다.

한편 한국의 정대협은 1992년 2월 8일 미야자와 당시 총리의 방한 때 제1회 수요집회를 개최한 이후로, 피해자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했음을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정대협은 구체적으로 7가지 요구를 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일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와 지금의 정치적 지형은 상당히 다릅니다. 1990년대 초 미야자와, 호소카와, 무라야마 내각은 전후 일본 정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보적인 정권으로서, 오히라-미야자와 파벌은 아시아 중시, 역사적 반성 등이 철저했고, 미야자와는 자민당 내 대표적인 호헌 세력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일본 정치의 최대 변동기로서, 자민당의 일당 지배가 무너지고, 연립정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사회당은 전쟁, 역사, 헌법 문제 등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사회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컨센서스 및 진보적 정치인들의 역할을 토대로 하여,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아시아여성기금 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95년을 전후로 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움직임도 나타나서 두 세력이 길항 관계를 이루게 되었지만, 이 길항 속에서도 진보적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기에 전향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일본에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금전적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에서는 혁신 세력의 약화가 두드러지고, 중도 정당들이 보수 정당에 협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고이즈미, 아베 정권이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있다가 선거로 심판받은 결과가 현재 민주당의 집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여러 실험을 했지만 현재는 자민당과 차이가 별로 없고, 노다 정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정계에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서는 소위 '양심세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예한 정치적 이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2011년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청구권협정상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해 양국간 해석상 차이의 문제를 동 협정 3조(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그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은 중재로 해결)에 의해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외교적 수단을 통해 거둔 성과가 없는데 중재마저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부작위이고,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후 정부에서 어떻게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 12월 한일정상회담의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12월 14일은 1000회

수요집회가 있는 날이었고, 이 날을 기념하여 평화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양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개최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영토나 역사문제에 있어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기보다는, 'non-action'을 통해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내놓아야 할지 일본측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측의 마지노선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없고, 국가가 배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총리가 사죄를 표현하고, 일부 보상하는 수준까지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죠. 한국측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상태로 보상이나 사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용어를 고안해서 '국가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는데, 일본측에서 보기에는 이 '국가책임'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보다 더 무거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측에서 계속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위안부, 정보보호협정 등 이슈별로 돌파구를 찾자는 입장이 우세해졌고, 실제로 전면적인 외교 단절 상태를 막기 위해 위안부 문제 해결은 중단된 채 이슈별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중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로 공 넘기기만 하고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외교 일정들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7월까지도 이 대통령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일본측의 대응이 없자 8월에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사 관련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슈를 분리하고,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일왕 사과 요구나 일본의 지위 하락에 관한 언급도, 불필요한 언급이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는 역으로 외교전략의 부재에서 나온 일입니다.

결국 이런 한일관계 경색은 외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달 APEC 정상회담에서 5분이라도 한일 정상이 대화를 나눈 것만 보아도, 더이상 갈등이 악화되면 외교적으로 얻을 것이 없음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신뢰회복, 소통 채널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난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선 국면에 이 문제가 복지에 밀려 더 크게 이슈화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민주당, 자민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치적인 불쏘시개로 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일의 현 정부가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한일이 계속 대립하면, 동북아 정세상 중국에게 유리하고 미국이 염려해야 하는 국면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 정권에 의한 문제해결이 가장 좋고, 여기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피해자, 약자 보호의 관점으로 풀자면 상당히 일방적인 접근이기에 일본을 궁지에 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반인륜적, 반인도적 문제라는 차원에서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한국의 도덕

적 우위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또한 과거사를 파헤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협력을 위한 장애물을 털고 간다는 관점에 합의하는 것을 토대로 이 사안에 접근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일본을 몰염치한 나라로 몰아세우려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외교의 본질도 아니며 소득도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양국 정부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일본의 우익과 한국 정대협의 요구는 합치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국익을 고려한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즉, 양국 문화교류나 영토분쟁 등 다른 이슈와 이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 공방으로 풀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상호 신뢰 및 소통에 기반한 외교적 협상을 통해 우선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괄적인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에 합의한 다음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시야에 넣어야 합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을 목표로, 사실인정→필요한 경우 사과→책임인정→보상 등의 단계를 밟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일본의 대응으로는, 우선 고노 담화의 정신을 살려 위안부 동원 당시 일본군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고, '본인의 의사에 반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강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리 및 대사의 공공외교를 통해,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 공식 사과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희생된 유태인을 기리는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와 같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국적 판단에 의해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교훈을 되새겨보면, 그 당시에는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민간 자금을 더했었지만 결과는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방식보다는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실질적 보상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측이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시정'의 의미로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안을 실천하는 것은 아마 양국에 존재하는 반대 세력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관료와 달리 정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정치가는 반대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전망을 해 봅니다.

■ 토론

Q1) 개인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보편규범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인상적이었

습니다. 저는 책임이나 보상에 앞서, 사실을 인정하고 역사를 기억하면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기념비를 건립한다든지, 역사교과서에 수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A1) 위안부, 독도 문제 등 한일관계상의 문제는 사실, 거의 대부분 그 핵심이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실관계는 해석보다 더 중요한데, 문제는 그 사실관계가 '정향(orientation)'이 없이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일관계에 대해 갈등적 이슈를 다룰 때 상당 부분의 사실관계는 일본측 자료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측이 제공한 증거는 피해 당사자의 증언뿐이고 별도로 찾아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찾아낼 책임은 바로 연구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 독일과 일본을 비교한 제니퍼 린드의 'Sorry State' 입니다. 그 논리의 근간은 역사적 화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사과나 책임이나 보상보다는,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미화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독일이 잘한 것은 사과나 보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연구자들의 역할이고,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연구하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교과서 수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추모비나 사료관 건립은 꼭 일본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처럼 일본을 나쁘게 묘사하고 비난하기 위한 시설 건립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처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반인륜적 범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료를 수집하고 전시한다면, 일본을 비난만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사람들이 와서 보아도 절실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기억을 위한 장치를 정치적으로 만들 때는, 감정적이기보다는 좀더 성숙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Q2) 저도 'Art of the Diplomacy'라는 책 제목처럼, 위안부 문제가 예술의 경지에 이를 만큼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제시하신 일본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해서, 아시아여성기금보다 어느 정도로 더 나아가는 수준이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국가배상은 없다'고 명백히 일본측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국가보상도 없다'는 언급을 일본측에서 직접 한 것인지, 그리고 '보상'은 개인에 대한 보상인지, 재원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민간 및 국가자본이 함께 들어간 형태여서 한국측에서 거부한 것인데, 만약 명칭이 국가배상이나 국가보상이 아니라 해도, 재원이 일부 세금에서 나간다면 국가의

행위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국가보상'을 요구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종의 교환관계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강제이주자, 원폭피해자, 위안부의 세 가지 전후 처리 중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본 정부가 일정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처리되었는데, 어떤 점이 달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가책임을 일본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밑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저는 아까 언급하신 것과 같은 '단계적 해결'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2) 이 문제에 대한 최근 대응을 보면, 사실상 일본이 전향적 제안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안이 아시아여성기금 때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전의 7:3으로 외무성과 민간자금을 혼합한 것과 달리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협상을 진전시키기보다는, 정대협의 반응을 의식해서 '국가책임'이라는 것을 지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가책임'이라는 용어 자체는 국제법 학자들에게 일부 통용될 뿐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고, 일본이 부정하는 법적 책임보다도 훨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책임'이라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한 한국 외교부도 실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간접적인 추론을 하자면,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포함해서 사과를 하고 정부가 나서서 보상하는 실질적 행동을 한다면, 그로써 책임을 진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국가책임'이라는 용어는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좋은 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안부 문제가 정보보호협정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로 일본이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동조한 것인데, 위헌 판결을 받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정보보호협정이 얽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이슈를 분리해서 따로 접근하는 것이 나았고, 그렇게 서둘러 연계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사할린 강제이주자와 원폭피해자 문제는 일본 정부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과와 실질적 보상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와 이 두 이슈의 차이는 우선, 한국 내에 위안부 문제만을 위해 활동하는 확실하고 강한 시민단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귀중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일본 측에서 부끄럽고 꺼리는 문제였기에 1994년 시점에서 정부가 나섰더라면 깨끗이 해결될 수 있었겠지만, 보수세력의 심한 반대로 인해 민간기금을 동원하여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보상하려다 화근이 커졌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현안 상태를 넘어 훨씬 더 복잡한 역사문제로 변할 것입니다.

Q3) 위안부 문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개되어 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민간 기금 없이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위안부 문제가 너무 정치화되고, 마치 다른 이슈와의 거래 대상처럼 여겨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본인들도 아시아여성기금 실패 이후 이 문제를 도덕, 인륜이 아닌 국가적 자존심이나 정치문제로 다루고, 책임 인정의 반대세력이 오히려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도구로 이용되면서, 이 문제가 국내정치의 문제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방금 일본 정치가들의 결단을 요구하셨지만, 국내적인 갈등을 해소할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정치가도 그 해법을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 국내적으로 보면 어떤 해법이 가능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3) 위안부 문제의 정치화 현상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1990년대 일본을 바꾼 3대 정치이슈를 꼽자면, 걸프전에 공헌하고도 평가받지 못한 부끄러움, 북핵문제, 종군위안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들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치열했고, 지금도 치열한 대립이 온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관련된 이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의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에 관련된 이슈들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4) 아까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대안 부분에서,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무라야마 담화에서 스스로 '침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도 센세이셔널했을 뿐 아니라, 이후 무라야마 담화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계승한다는 자민당 출신 총리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사과 이상의 무엇을 더 바라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Q5) 최근 센카쿠 관련 보도를 보면, 영토 문제에 대한 중국측 비판이 이제는 역사 문제와도 얽히고 있는 듯 합니다. 중일국교정상화 때 역사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미 라인을 넘어버린 듯 합니다. 즉 중국은 새로운 단계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고, 영토문제를 역사문제로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중국과 대만에서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 (한국에서는 영토분쟁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만 및 중국과의 연계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일간에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익'이 많이 있지만, 가장 무섭고 성가신 것은 '보이지 않는 우익'입니다. 말하는 내

용을 언뜻 들어보면 진보적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점점 우익성향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실상, 이 '보이지 않는 우익'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연구자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본의 연구자와 어떤 식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연구자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신뢰관계 구축의 방법에 대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Q6) 제가 오늘 새삼 느낀 것은 새로운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과거의 성과를 살려서 자산으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고노 담화나 그에 준하는 담화가 몇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왜 일본 정부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후 정치인들의 직·간접적 부인이 반복되어 그런 노력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책임있는 새로운 발언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발언이 일단 나왔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일본정부의 입장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치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익을 구제불능의 특수한 집단으로만 보는 관점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익의 발상은 현재 일본이라는 공동체의 존재에 공헌한 존재, 즉 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들이 보기에는 전사자들의 숭고함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는 존재들이 바로 위안부이기 때문에, 우익들이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태도의 전제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절대화하는, 어찌보면 보편적인 입장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익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4,5,6) 우익의 변수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자신들의 공동체에 공헌한 이에 대한 추모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전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책임 문제에 대해 깨끗하지 않은 일본으로서는 이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전전의 파시스트적 체제를 동경하는 듯한 형태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이는 어디에나 있는 보편현상이나 공동체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체제에 관한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보수와 우익을 구분합니다. 우익은 폐쇄적 민족주의자이고, 쇼비니스트이며, 자기중심적 선악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게이오대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우익은 증상이지 체제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지요. 우익이 정권을 만약 잡는다면, 저는 일본이라는 체제를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익이 일본 정치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인 것은 분명하고, '보이지 않는 우익'을 잘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역할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안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일 지식인들 간의 인식공동체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숙한 사람들이 양국간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대만과 한국이 영토문제를 두고 연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연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일본이 현재 단독으로라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마 중국은 독도에 대한 현재 일본의 행동을 보고, 몇 년 뒤 센카쿠 문제에 대해 일본을 모방해 비슷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일간 영토문제에 대해 한국이 중국과 연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두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일본은 아직 그런 역사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독도와 센카쿠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풀지 못하면 일본은 앞으로 곤란한 입장에 설 거라고 봅니다.

Q7) 먼저 발표 내용 중에, 2001년 국제법정이 개최된 내용이 빠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시민사회에서는 전력을 기울여 노력해 왔다는 점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간 해결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사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청구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구권 문제와 연속선상에서, 한센병 문제 때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A7) 일본이 청구권 문제를 두려워하는 건 맞지만, 일본이 가지는 딜레마는 두 종류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하나는 위안부 동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제쳐두고 우리나라에만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이슈와 원폭피해자, 한센병 환자 등 다른 이슈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일본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끝/